중민재단

창 립 기 념 행 사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Joongmin Institute for Social Theory

일 시 : 2012년 1월 30일(월),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 중민 사회이론연구재단 세미나실

프로그램

<1부> 세미나 1:30 ~ 3:00

주제: 중민 이론과 21세기 한국

- 사회: 김종엽 (한신대: 사회과학대)
- 발표자
  1) 박영도 (연세대: 국학연구원) "중민 이론과 성찰적 비판문법"
  2)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학) "중민 이론과 제2근대화"
- 토론자
  - 이재혁 (서강대: 사회과학대)

<2부> 토론회 3:00 ~ 4:40

주제: SNS 시대의 민의 소통양상과 정부의 역할: 민본 전통의 재구성

- 사회: 이정복 (서울대: 명예교수/ 정치학)
- 토론자
  - 장덕진 (서울대: 사회과학대)
  -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 유창주 (서울 시청 뉴미디어부/ 시장특보)

<3부> 창립 기념식 5:00 ~ 6:00

- 사회: 김홍중 (서울대: 사회과학대)
- 식순

1. 개회 선언
2. 재단 설립 경과 보고
3. 임원 소개
4. 영상물 상영
5. 축하의 메시지
    - 이해찬 (전 국무총리)
    -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
6. “재단에 바란다”
    - 양영진 (한국이론사회학회장)
7. 감사의 말씀
    - 한상진 (중민재단 이사장)
8. 폐회 및 기념촬영

❖ **저녁 식사 및 담소** 6:00 ~

중민이론과 제2근대화 12가지 명제

한 상 진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학
베이징대 초빙교수
hansjin@snu.ac.kr

이 발제의 목적은 필자가 1980년대 민주화 경험의 배경에서 발전시켰던 중민이론과 현재 탐구 중인 동아시아 제2근대화론을 연결시켜 중민이론의 함의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진하려는 것이다. 우선 간략히 중민이론과 제2근대화론의 요체를 소개하고 12가지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민이론은 198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뚜렷하게 성장했던 중산층이[1] 어떤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폭 넓은 공중의 관심에 부응하여 발전된 것이다. 당시 정치 현실은 비극적인 1980년 5월의 '광주사태'를 경유하면서 군부독재에 대해 대학생 집단이 독특한 응집력으로 저항했던 시기였다. 이런 대결의 상황에서 근대화의 수혜층으로 성장한 중산층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중매체를 포함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시 운동권 학생들은 중산층을 기회주의적 집단으로 불신한 반면, 무산 대중을 변동의 주체로 상정하는 논의를 주도했다. 보수세력은 운동권 학생들의 급진 이념을 체제전복의 위험으로 포장하여 중산층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자 했다. 이렇게 형성된 양극대립의 상황에서 필자는 중산층

[1] 1981년 경제기획원 사회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한 필자의 분석에 의하며, 소득과 비소득부문(교육, 주택, 종사상의 지위)에서 공히 중산층의 지위를 확보한 가구는 도시 가구의 36.1%에 이르렀고 이것은 1985년 41%로 증가했다. 생활수준이 중류에 속한다는 응답은 당시 65%를 넘고 있었다.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기층민중보다 정치적 권위주의에 더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사회조사를 통해 발견하면서 중민이론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학생들은 기존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민중에 대한 부채 의식 속에 자신의 성장 모체였던 민중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자 하는 강한 자의식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곧 사회경제적 중산층의 지위가 의식과 행동의 면에서는 민중의 정체성과 결합할 수 있는 언술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뜻했다. 이에 착안하여 필자는 중산층이자 민중인 중민 또는 민중의 합리적 중심으로서 중민이 권위주의 국가의 현실에서 민주화의 사회변동을 이끄는 핵심세력이 될 수 있다는 논지를 폈다. 진보와 보수 양 쪽의 공격을 받았던 이 이론은 그러나 1987년 6월의 민주화 항쟁을 경유하면서 그 타당성이 입증된 셈이 되었다.

그 뒤 필자는 중민의 핵심은 탈인습적 가치관에 있으며 1980년대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이 가치관은 유실되지 않고 작동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뒤에 나타난 '노사모' 현상은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하겠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1980년대 세대와 개인주의 경향이 강한 이후의 디지털 세대를 구별하여 양자 사이의 격차와 단절을 강조한 세대담론이 관심을 끌었던 상황에서 필자는 표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세대 사이에 구조적 연속성이 발견된다는 주장을 폈다. 즉 1980년대에 정치적으로 표출되었던 탈인습의 가치관이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21세기에는 일상생활의 각 영역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경험으로서 SNS 소통혁명을 선도하면서 정치사회 변동을 자극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은 중민의 탈인습의 가치관이 소진되지 않고 디지털 세대에 의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2근대화는 근대성의 한계에 직면한 서구 지식사회가 하나의 탈출구로 제안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민주화로 특징되는 근대화의 이면에서 놀랍도록 확산된 지구적 위험에 주목한다. 생태위험, 금융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 국제테러리즘, 핵 위험, 신종 질병 등이 보기다. 이 이론은 지구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코스모폴리탄 시각변동을 주문하면서 진보적 대안을 사회주의와 같은 거대 이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삶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소극적 조건으로서 성찰적이고 초국적인 위험예방 거버넌스 구축에서 찾는다. 이런 점에서 제2근대화론은 근대성의 한계를 지적할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탈현대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필자의 관심은 동아시아가 직면하는 위험사회의 관점에서 제2근대화

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서구를 추격하는 돌진적 근대화에서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서구와 함께 제2근대화의 발상이 착근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제2근대화는 근대화의 실패가 아니라 놀라운 성공의 의도치 않았던 자기파괴적 부산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등에서 강의 연구하면서 필자가 내린 결론은 울리히 벡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이론은 이것이 표방하고 있는 열린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경험과 문화전통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외부에 적용하여, 동아시아의 변동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꼭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발전경험과 문화전통에 충실한 눈으로 제2근대화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서구의 이론은 아직 구조적 설명을 행위이론으로 접목시키는 데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지만, 동아시아에서는 행위주체로 연결되는 문화적 추동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중민이론과 제2근대화의 관계에 대하여 평소의 생각을 12가지의 명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명제1: 중민이론과 제2근대화론의 역사적 배경

한국의 근대화 경험에서 볼 때, 중민이론과 제2근대화론은 1960년대 이래의 돌진적 근대화가 거둔 유례 없는 성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이면에 누적된 부작용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체적이고 규범적인 사회변동을 포착한다. 중민은 사회변동을 선도하는 행위주체를 가리키고 제2근대화는 변동의 구조적 틀과 방향을 가리킨다.

명제2: 중민의 성격과 내포

중민이론은 산업성장의 결실로 등장했던 중산층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분화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분파가 1980년대의 정치적 전환기에 국가중심의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여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요구함으로써 나타난 역동적 발전을 설명하고자 한다. 중민은 생활수준은 중류에 속하나 의식과 행동은 건강한 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권력이나 인습에 순응하기보다 합리적 개혁을 선호하는 참여지향적 집단을 가리킨다. 이들의 탈인습적 가치관은 정치적 민주화를 거치면서 일상생활의 각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와 그 뒤를 이은 디지털 세대 사이의 단절을 주

장하는 논의도 있었으나, 최근 뉴미디어와 결합하여 폭발적인 정치사회 변동을 촉매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둘 사이의 연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민은 한국사회를 밑으로부터 움직이는 탈인습 세대의 선두이자 중심에 서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명제3: 제2근대화의 중심 과제

제2근대화는 돌진적 근대화가 거둔 성공의 역설, 즉 정치적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서구보다 더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험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서구가 주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의 자기파괴적 위험, 즉 생태파괴, 핵 위험, 금융위기 등에 더하여 한국은 중국이 그러하듯이 돌진적 고도성장이 가져온 의도치 않았던 부산물로서 시민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증유의 위험들에 둘러싸여 있다.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볼 때 제2근대화는 이런 위험사회의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역사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명제4: 발전경로의 다양성

서구와 동아시아는 지구적 위험(도전)에 대한 대응(응전)이라는 측면에서 제2근대화의 공통점을 가지나 역사적 발전경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제2근대화를 배태시키는 토양으로서 근대화의 경험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동서양의 공통분모를 잡으면서도 동아시아의 독특한 발전경로를 포착하는 제2근대화론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안의 변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은 근대화 과정을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견고해진 국가중심의 발전논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넘어서는 신축적이고 포용적인 발전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근대화를 이끈 국가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제2근대화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명제5: 전통문화의 재구성

한국, 중국, 일본의 근대화는 서구 열강의 군사적 경제적 위력 앞에서 자신의 전통과 유리된 채 서구의 뒤를 따라 잡는 모방과 복제에 주력했다면, 제2근대화는 상실되었던 자신감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한다. 현대의 눈으로 전통문화를 재구성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발전의 규범적 좌표를 찾고

자 한다. 이렇게 볼 때, 제2근대화의 문화적 기초는 서구의 뿌리 깊은 양극대립 세계관과 구별되는 소통과 통합의 (공존지향적) 중용 문화, 인간 존중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 인본/민본전통의 재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문화적 자의식이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활발히 개화되고 있다.

명제6: 제2근대화와 소통

제2근대화에는 '밀어내는 힘' (push force)과 '끌어당기는 힘'(pull force)이 작용한다. 위험사회에 대한 대중 인식의 민감성이 전자를 대표한다면, 소통에 대한 대중의 갈구가 후자를 대표한다. 돌진적 근대화 과정에서 소통은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거나 자기 주장을 알리는 수단으로 오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근대화를 이끄는 힘은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의 말을 상대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소통, 설득을 넘어 공감을 자아내는 진정성이 있는 소통에 대한 갈구가 돌진적 근대화 이후의 사회발전을 이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한 인터넷 최강국의 지위는 다른 어느 요인보다 제2근대화를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다. 한국은 위험사회에 대한 대중의 민감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뉴미디어 시대에 시민이 이끄는 소통혁명이 어느 곳보다 앞서고 있는 나라이다. 즉 제2근대화의 동력이 강하다.

명제7: 양극화의 명제

제2근대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할 지구적 위험의 하나는 빈부격차로 상징되는 양극화 추세이다.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격차가 늘어나는 데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압력이 작용한다. 즉 세계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으로부터 나오는 양극화의 압력이 이를 조정하는 완충기제 없이 전면적으로 관철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제2근대화는 이런 구조적 압력을 조정, 완충, 억제할 수 있는 사회체제 내부의 총체적 대응 역량에 의존한다. 강자가 경쟁의 부담을 약자에게 전가시키는 손쉬운 양극화 전략 대신 공존을 보장하는 소통과 타협의 정치적 협약에 참여할 때 제2근대화는 가능해진다. 이 과제를 국가가 홀로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에 못지 않게 고용을 촉진하는 사회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며, 집단 이익의 절제가 머지 않아 보다 큰 이익과 번영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심어 주는 정치적 리더십이 제2근대화에 필수적이다.

명제8: 개인화의 명제

서구의 제2근대화론은 개인화' (individualization)의 추세에 주목하고 있으나 이것은 개인주의 문화전통을 전제한 것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변동하는 관계'가 보다 보편적으로 타당하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적절하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올 뿐 재진입의 길이 열리기 힘든 서구의 개인화 유형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개인화와 함께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번창하는 것이 제2근대화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의미 있는 변이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명제9: 제2근대화와 코스모폴리탄 변동

제2근대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할 다른 지구적 위험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상태파괴이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초국적 문명의 위험을 뜻한다. 이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양상은 위험의 원인과 처방에 관해 이유 있는 갈등을 보이고 있으나, 분명한 점은 아무리 강국이라 하더라도 한 국가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험에 빠진 인류라는 관점에서 초국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기에서 가시화되듯이, 제2근대화는 국민국가의 시대를 넘어 코스모폴리탄 변동과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종래의 관행을 넘어 글로벌 기준에 견주어 검증하고 일신하는 노력이 제2근대화를 이끈다. 해외에 나가 있는 700만명 동포의 잠재력을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도 요구된다.

명제10: 제2광복의 의미

한국의 근대화 경험에서 제2근대화는 '미완의 광복' 개념에 닻을 내리고 있다. 일제 식민지 체제에 저항했던 독립운동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주권의 회복을 지향했으나 자신의 꿈을 광복의 개념으로 포장했다. 큰 빛을 되찾는 역사적 프로젝트는 불행히도 광복운동의 지도자들이 해방 이후 정치적으로 도태되면서 소실되었다. 그러나 3.1 독립선언서, 김구의 문화국가론 등에 그 편린이 들어나 있다. 제2의 광복은 무엇보다 국토와 민족의 분단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평화와 인본의 가치관을 세계에 선양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이런 잠재력을 선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류'이다. 경제발전, 민주화, 탈인습적 가치관 위에서 창의력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실험들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면서 제2광복의 문화적 토양이 형성되고 있다. 제2

근대화는 여기에 깃든 문화적 자긍심을 밀고 나간다.

명제11: 박정희와 김대중의 화해

한국의 제2근대화가 부딪치는 한 중요한 과제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이념간 흑백대립을 넘어 사회적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이 과제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명실상부한 화해로 상징된다. 제2근대화는 역사의 단절과는 다른 비판적 계승의 의미를 갖는다. 제2근대화는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프로젝트에서 출발하여 김대중이 남긴 민주주의 인권국가, 지식정보강국, 남북화해, 생산적 복지를 계승함으로써 한국 근대화를 이루는 양대 기둥의 상보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위한 역사 인식의 토대를 마련한다. 한국의 제2근대화는 김대중 시대의 개혁과 함께 문지방을 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박정희가 그러했듯이 김대중 역시 국가중심의 시대, 권력정치의 시대에 갇혀 있었다. 제2근대화는 이 유산을 넘어 시민참여적 생활정치로 전진한다.

명제12: 제2근대화의 양 날개

제2근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소통역량이 증가하여 시민들이 변화욕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대응하여 생산적 결실을 도출하는 제도정치의 능력 신장이 중요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탈인습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들의 출현, 소통혁명을 이끄는 SNS 테크놀로지 시대의 도래, 광범위한 문화변동에 힘 입어 새로운 변동의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다. 중민이론은 이런 밑으로부터의 사회변동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한국의 딜레마는 제도정치의 역량이 아직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2근대화의 모호성이 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지각변동이 이미 시작된 이상, 한국의 정치는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다.